



제22대 총선 이후 노동 분야 정책 예상

1. 개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전체 300석 중 여당(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108석, 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확보하였습니다. 노동 분야는 여야의 격돌이 잦은 분야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노동 분야 정책에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2. 여야 공약의 특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에 있어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다르지만, 현행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에서는 여야 간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과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그 이외에 별도로 노동 분야에 관한 정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여야 노동 분야 관련 세부 공약 비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산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부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극복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	· 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등
채용 관련	· 허위 채용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채용 갑질 근절 ·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	·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한 여성청년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관행 근절(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근로시간 단축	없음	· 주4일제(4.5일) 도입 추진하여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법, 제도 개선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 노동조합법 개정 재추진 ·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 명문화 ·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4. 시사점

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야는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생활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채용에 관한 공정성 강화

여야의 공약 내용은 다르지만, 채용과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시키겠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채용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채용 갑질을 근절,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를 내세웠는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획 근로감독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청년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 근절을 내세웠는데,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포괄임금제 금지

현재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로서 법원마다 그 효력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도 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확보한 이상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지만, 현 정부는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는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에 대하여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괄임금제 금지가 명문화될 경우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기업으로서는 우리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포괄임금제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주4일제 논의 지속화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하여 주4일제(4.5일)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지원 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별도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찍이 주4일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4일제에 관한 논의는 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의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노동조합법 개정 재추진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적으로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 등까지 포괄할 수 있게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외에도 서비스직에서까지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야당의 의석수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한 재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21대 국회와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중층적 도급구조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 각종 법 개정에 관한 여야의 격돌

더불어민주당은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취한 입장에 미루어 보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야당의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야당의 공약은 노사관계 등 노동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향후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